

이덕일의 '역사의 창'



잘못된 서훈 등급

독립 유공자 서훈 등급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는 데 공을 세운 독립 유공자들을 표창하는 건국훈장은 총 5등급인데 1등급이 대한민국장이다. 2등급이 대통령장, 3등급이 독립장, 4등급이 애국장, 5등급이 애족장이다.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저 분이 왜 저 등급이지?" 하고 고개를 가우뚱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국훈장 수훈을 재개했

누구인지 아는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없었다. 미국에서 이승만과 함께 활동한 인연으로 외무부장관을 역임했고, 5·16 군사 쿠데타 후 재건국민운동본부장, 그리고 유신 시절 한국반공연맹이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처럼 과포장도 물론 문제지만 실제 독립운동 행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는 더 큰 문제다. 이런 예는 너무 많지만 우선 두 분만 들면 석주 이상룡 선생(1858-1932)과 우당 이회영 선생(1867-1932)이다. 일제가 나라를 강점하자 두 선열은 온 집안이 전 재산을 처분해 만주로 망명했다. 만주에 독립운동 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만주에서 군사력을 길러 결정적 순간에 국내 진공 작전을 전개해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으려는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찾게 되는 나라는 국왕과 귀족들이 중심이 되는 제정(帝政)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중심이 되는 공화정(共和政)이었다. 그래서 석주와 우당은 서간도에 민단자치조직인 경학사(經學社)를 세웠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1920년의 봉오동, 청산리 대첩은 신흥무관학교에서 전문 군사 훈련을 받은 졸업생들이 위관급 및 영관급 장교로 병사들을 지휘했기에 거둘 수 있었던 승전이었다. 게다가 석주 이상룡은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인 국무령제로 정체(政體)를 전환했을 때 초대 국무령(國務領)을 역임한 국가수반이었다.

우당 이회영은 말보다 행동으로 독립전쟁에 나섰던 아나키스트들의 대부였다. 두 분 모두 무장 투쟁으로만 한국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 무장 투쟁론의 대부였고, 1932년 김립식 서탄에 서한 많은 인생을 마치면서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유해를 본국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유언할 정도였다. 이회영은 예순여섯의 노구로 일제가 강점한 만주로 잠입해 무장 투쟁을 전개하려다가 대련 수상 경찰서에 체포되어 고문사했다. 실로 두 선열은 한국독립전쟁사의 이념에 있어서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앞머리에 두어야 할 분들이지만 두 분 다 3등급인 독립

장에 머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현상의 뿌리를 찾으면 반드시 일제 잔재와 만난다. 박정희 정권 때 서훈 심사위원 중에 이병도·신석호 같은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출신들이 들어가 있었다. '한국독립사'를 저술한 참의부 참의장 출신 회산 김승학 선생도 생존 독립운동가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병도·신석호 양인에게, "임자들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뭐 아냐?"라고 일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독립 전쟁 반대편에서 있던 사람들이 서훈 등급 결정에 주도했고, 그 결과 지금의 뒤죽박죽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유관순 한 분의 등급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유관순에 대한 재평가를 포함해서 첫 단추부터 잘못된 끼운 서훈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근본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선열들의 살신성인으로 되찾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의료칼럼

환절기 호흡기 질환 '주의보'



김지용 청연한방병원장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과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우수가 지난지도 어느덧 열흘이 지났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점점 해가 길어지고 낮 기온이 10도를 웃도는 등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엔 일교차도 커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전후로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보통 갑자기 코 속이 간질간질 하면서 재채기를 하거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혀 숨쉬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증상이 심하면 눈이나 목안이 따갑고 간지럽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면서 식욕이 떨어지게 된

다. 또 코의 염증이 부비동염으로 발전하거나 중이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 갑작스런 큰 온도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서 이러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증상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환절기 동안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먼저 옷, 마스크 등을 통해 기온 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환절기의 큰 일교차는 비염 환자에게 더욱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코는 외부 공기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으로,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코에서부터 덥혀 주고 축축하게 만들어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로 폐에 전달하게 된다.

코는 외부 기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알레르기성 및 비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두 환자군 모두 따뜻한 환경에 있다가 차가운 환경으로 접어들었을 때 처음 30분, 차가운 환경에 있다가 따뜻한 환경으로 접어들었을 때 처음 30분에서 코 막힘에 대한 주관적인 증상 및 객관적인 지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침에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일어나면서 차가

운 공기를 접하게 될 때,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해가 지면서 기온이 낮아진 외부와 접촉할 때 증상이 잘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려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휴대하기 쉬운 여분의 옷을 입어 기온 변화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마스크를 써주는 것도 호흡기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코와 목 기관지 점막이 말라 건조해지면 감기 바이러스가 신체에 침투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되므로 충분한 수분의 섭취가 중요하다.

커피나 탄산음료 보다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하루 6-8잔 정도 마셔주는 것이 좋다. 한방 건강 차를 마셔주는 것도 좋은데 모과, 유자, 오미자, 대추, 도라지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통해 건강도 챙기면서 수분도 보충해 줄 수 있다.

아울러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피하기 위해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적당한 운동과 외부 활동으로 규칙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쌀쌀한 날씨에는 근육이 수축되고 유연성이 떨어

어지기 쉬우므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 운동 및 스트레칭을 미리 10-20분 정도 실시해 유연성을 서서히 증가시켜 주는 것이 좋다.

평소엔 운동을 잘 하지 않았다면 갑작스럽게 과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일정시간 동안 꾸준히 땀이 날만큼 운동해 주는 것이 좋다.

외부 활동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는데 우리 몸에서 항염증 및 면역 기능을 돕는 비타민D의 대부분은 햇빛에 노출된 뒤에 합성된다. 몇몇 연구에서는 비타민D 부족이 전식 및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는데, 식사를 통해 충분히 비타민 D를 섭취하고 외부 활동을 통해 합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같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평소보다 커지는 환절기이므로 예방하는 습관을 들여 미리 질환을 막는 것이 좋다. 본인의 노력에도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社說

불법 부추기는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해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출마한 후보들이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간다. 전국적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모두 1344곳에서 조합장을 뽑는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203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유권자는 광주가 3만561명, 전남이 42만8279명으로 광주·전남 인구의 7.3%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일반인의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조합 내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 불법선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광주·전남에서만 벌써 40여 건의 불법선거 사례가 적발됐다.

조합장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지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현직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 때문에 신인들이 당선을 위해 금품과 향응의 유혹을 떨쳐 내지 못하는 것이다. 5억 원을 풀면 당선되고 4억 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이른바 '5당 4락'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현직에게 유리한 제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3개월간 선거 운동이 가능한 지방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선거 운동 기간이 13일에 불과하다.

더구나 후보 본인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후보자의 정책 대답이나 토론회도 불가능해 원천적으로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은 물론 얼굴조차 제대로 알리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은 4년 전 치러진 제1회 선거 때에도 제기돼 정책 토론회와 예비후보자 운동기간 신설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조합장 선거가 혼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당장은 힘들지라도 선거를 치른 후 불·탈법 선거를 철저히 가려내 법으로 옥석을 가리고 차제에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5·18과 2·28 연대 달빛동맹 강화 기폭제로

'518' 변호판을 부착한 시내버스가 이미 대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데 이어 광주에서도 '228'번 버스가 운행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부터 양 지역의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는 대표단이 번갈아 참석하며 교류를 이어 오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역사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518'과 '228'은 각기 광주와 대구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홍섭 광주시장은 최근 "광주 5·18 정신이 대구 2·28 정신과 맞닿아 달빛동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구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228번 시내버스 노선 운영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열린 달빛동맹 민간협력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대구에는 현재 2·28 기념 중앙공원 앞을 지나는 518번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오늘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리는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70여 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2·28은

1960년 2월 28일 대구 지역 8개 고교 재학생 등 1200여 명이 자유당의 부패와 독재에 맞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의 도화선이 됐다.

양 도시는 그동안 5·18과 2·28 기념식에 대표단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광주의 5·18 단체들은 지난해 2·28 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적극 지원했다. 또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하면서 양측의 역사를 매개로 한 공조는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이제 달빛동맹 사업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에 이어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과 우수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달빛펀드 조성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 도시의 역사 연대가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서 공동 발전을 이루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반변치 못한 최린이지만 기미년 3·1 운동 당시 일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자라고 해서 그들은 그 후 나를 주목하고 위협하고 또 유혹하여, 끝내 민족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게 하였으니 오직 죄스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최린. 그는 일제 강점기에 3·1독립선언 민족 대표 33인에도 포함됐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다. 3·1독립선언 뒤 3년간 옥고를 치르고 1921년 12월 출소해 교육자·종교 지도자 등으로 지내다가, 1934년 마침내 조선 총독자문기구인 조추원 취임 관 대우 참의에 임명되며 민족 반역의 길을 걸

그러움과 죄스러움' 없이 주의·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10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일제의 잔재는 남아 있고 일본은 식민 통치에 대해 진정한 반성 없이 근국주의를 지향한다. 우리 역시 인적 청산은 고사하고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만들어 놓은 법이나 제도, 명칭, 친일 인사의 학교 교과까지 그대로 또는 변형해 사용하고 있다.

일제가 남긴 가장 큰 잔재는 관치(官治)와 관제(官制)다. 주민에게 봉사하며,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自治)를 지원하고 보조해야 할 중앙 정부 예산과 조직을 무

기로 지자체와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조선총독부가 지자체, 주민 조직, 시민 단체까지 장악해 관료를 파견한 형태와 유사하다. 도시 개발 방식 역시 마찬가지다. 일제와 일본인들이 오로지 통치와 수익을 위해 조선 시대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던 역사를 지워낸 것처럼 지금의 개발 또한 그 세력의 주축이 됐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결코한 기득권층을 형성했다. 그들은 지금도 일정한 권력과 부를 유지하며, '부

일제가 남긴 것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주) 국문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FAX 222-8005)	(FAX 222-0195)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채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처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납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 고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답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가치의 실현에 앞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깃뚫힌 참축한 현실에 대한 즉자적 분노를 표출하는데 더 충실했다. 그래서 필자는 민주화운동 대신 '광주 시민 항쟁'이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한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면 반박할 눈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5·18을 폄훼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하지 않는다. 필자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실제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단지 그 실제적 사실을 해석하는 이론적, 철학적, 인식론적 관점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의 주장은 보편적 이성의 판단과 과학적 추론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5·18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하나로서 충분히 옹인된다.

그런데,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은 어떤가? 차마 대응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저급한 수준의 논리와 허무맹랑한 조작, 그 정치적 악의가 환형하게 드러나는 자가 당차적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음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비이성적 왜곡 담론이 국무부 일부에 머물지 않고, 광주 항쟁을 겪지 않은 일반 대중의 의식 속에 점진적으로 내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최근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이성적 판단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젊은이가 지만원류의 북한군 개입설이 제법 설득력이 있다고 토로하는 것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사회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왜곡 담론의 이러한 확산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대중의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에 기인 반복적인 노출 효과 덕분이다. 대부분의 유언비어와 거짓 선전의 생산자들은 특정 사안에 대한 대중의 합리적 무지를 이용하여 왜곡된 담론을 대중의 의식에 내면화시키고, 그 담론을 내재화한 수용자를 숙주로 삼아 담론을 확대 재생산한다. 그러므로 대중의 합리적 무지가 깊으면 깊을수록 왜곡 담론은 그 정당성을 더 확보하고, 그 외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간다. 무려 39년 전에 광주에서 일어나 비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대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국가가 5·18의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대중을 적극적으로 계몽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1년 전에 '5·

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 상태이다.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진실위원회'는 광주에서 일어난 비극이 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토대로 민주화운동으로서 그 역사적 진실을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확인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5·18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역시 이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숙의될 수 있어야 한다. 단, 그 의견의 다양성은 어디까지나 이성적 보편적 규범이 용인하는 수준 내에서 합리적인 주장의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거부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공론장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필자 역시 대통령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인사를 제추천하여 진실위원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5·18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표출하시라. 이게 전대미문의 난맥상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 다.